

與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 vs 野 “재투표 통해 법안 관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양곡법 이어 연속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국민 건강에 악영향”
민주당 “국민과 맞서는 길 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및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반면, 여당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어 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껌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란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

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돼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김남국 진상조사 난항… 국회 윤리위 징계 거론

여야, 김 의원 향한 공세 고삐
국회 윤리특위 구성 마무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여야 정치권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거론된다.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자체 진상조사가 검찰 수사로 어려워지자,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이후 당 차원에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의원에게 이른바 ‘코인 논란’ 추가 자료 요청 후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체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민주

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당 전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규정한 뒤 자금 출처와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료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에 전체

적인 대응 방향, 이상 거래 시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윤리특위 징계 수순을 밟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김남국의 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1소위는 국민의힘, 2소위는 민주당 구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잠정 합의했다.

변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1년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재정 기조, 부동산 등 국가안정 성과”

尹 대통령 2년 차 첫 국무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 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

‘마약청’ 신설 되나… 與, 처벌·재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시사

국민의힘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

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 사전 예방과 처벌·단속, 치유·재활, 복귀 등 절차가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청 신설 가능성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내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위원인 정희용 의원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취 후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 재활, 단속은 법무부, 학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마약청을 만들게 되면 전체를 통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